

요란했던 LH발 투기 광풍 수사... 처벌은 '미미'

광주·전남 356명 송치·8명 구속하고 부정취득 이익 142억 환수 전직 공무원·정치인 등 연루 시민 허탈감... "엄중한 처벌"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으로 올 한 해 전국은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폭발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투기 의혹 조사 방침을 선언하면서 본격화했다.

1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했다. 집을 사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사서 속상한 시민들도 적지 않다. 나빠진 민심도 쉽게 회복될 조짐을 찾지 못했다.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을 사들여 12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구속됐다. 담양에서는 군의원이 지역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가족 등을 동원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붙잡혔다. 정현복 광양시장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개발지구 편입이나 도로 신설 공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성용 부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지금까지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하는 등 111명(23건)을 검찰로

넘겼고 전남경찰청은 5명을 구속하는 등 245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142억 40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역대 최고로 집값이 폭등한 데다,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기관 직원, 공무원, 지방의원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은 공분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소촌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

의로 함께 재판에 부쳐진 현직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외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분양권 전매 등 불법 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벌금형 처분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는 시민들 분위기도 감지된다.

모든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수사가 많다. 광주경찰청은 37건, 전남청은 67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투기와의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오수집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컸다"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법원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탄가스통 불판 옆에 방치 폭발로 손님 화상 입었다면 식당 주인 금고 6개월·집유 2년

고기를 굽다가 교체해 불판 옆에 놓아둔 부탄 가스통이 폭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고깃집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시 북구 모음식점에서 손님 B(58)씨 등이 교체한 부탄 가스통을 빨리 회수하지 않아 불판 옆에 놓여 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되면서 폭발해 B씨 등 손님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력이 약해진 가스통을 교체하겠다는 B씨 등 손님 요청에 따라 견네웠는데, B씨 등이 달궈진 불판-가스레인지 등 화기 옆에 가스통을 놓아두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폭발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우선, 손님이 고기를 굽다 가스레인지에서 빠른 테이블에 놓아둔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봤다. 또 부탄가스통이 달궈진 불판에 가깝게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었다면 가열돼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식당주인은 신속하게 회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판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고 식당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치료비 지급 등이 가능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요양병원 행정집행 충돌 2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 공장 내 그린요양병원에 대한 범위 행정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집행관들이 식당 내 집기를 꺼내고 있다. 이날 요양병원 식당부에서 집행이 진행되자 병원측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입원환자 30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할수 없다"고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충돌이 발생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산단 화재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4명 추가 입건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화재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 관련, 입건자가 늘어나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9일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안전조치·안전교육 준수 여부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이일산업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일산업 현장관계자, 하청업체인 A 플랜트 대표 등 4명을 입건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이일산업 폭발 사고 관련, 입건자는 8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8일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3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환경단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 중단하라"

"보존과 관리가 제1의 원칙"

광주 환경단체 등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각각 29일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무등산 접근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이용섭 광주시장 발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이 시장은 28일 민선 7기 광주시 성과와 향후 시정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 직후 "무등산 접근성 향상 등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케이블카도 포함되느냐

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사실상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등산 국립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 친환경 등으로 포장한 개발이나 활용보다 보존과 관리가 제1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도 "내년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무등산 '활용'이 무등산 '개발'을 위한 핏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무등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